

1985-87년 개헌·대선국면과 민중운동

미완의 87년이 2017년 촛불에 주는 교훈

김태훈 | 정책교육국장 | psspcth@gmail.com

< 목 차 >

요약

1. 왜 다시 1987년인가?
2. 개헌투쟁의 방향모색기: 1985년
 - (1) 1985년 신민당의 총선 승리와 개헌특위 제안
 - (2) 민중운동 내 주요 쟁점: 야당과의 관계설정
 - (3) 민중운동의 개헌투쟁론: 형성과 전개과정
 - (4) 민정당의 개헌특위 거부와 국면전환
3. 개헌투쟁 고조기: 1986년 상반기
 - (1) 투쟁의 대중적 고양
 - (2) 학생운동 : CA-NL
 - (3) 노동자·농민·재야민주화 운동
4. 개헌협상 실패와 호헌, 87년 6월 항쟁
 - (1) 내각제 협상의 실패와 4.13 호헌조치까지
 - (2) 국본의 결성배경과 한계
 - (3) 6월 항쟁과 6.29 선언
5. 87년 7-9월 : 6.29 이후 노선분화와 노동자대투쟁
 - (1)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폭발
 - (2) 노선 분화의 조짐: 군부독재 종식투쟁론과 군부독재 타도투쟁론
 - (3) 개헌협상
6. 87년 10월-12월 : 선거국면 노선분화와 군부 재집권
 - (1) 후보단일화 논의의 경과
 - (2) 비판적 지지론
 - (3) 후보단일화론
 - (4) 독자후보론
 - (5) 군부재집권 및 사후 평가
7. 총평: 1987년의 교훈과 2017년

〈 요약 〉

- 촛불집회 현장발언과 언론, SNS 등에서 현 국면과 1987년 6월에 대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87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완인 것인가?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1987년을 불러오는 담론은 이 지점에서 현재적 쟁점이 된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친 시민 주권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1987년을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에 대해 “왜 광장에 나왔던 시민은 곧바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는가?”를 물어보고자 한다.
-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갑자기 분출된 것이 아니다. 70년대 말과 1980년 서울의 봄에서 폭발했던 민중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압되었다가 정권 중반부 유화국면을 계기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이 발생했고, 이념적 측면에서는 사회성격논쟁이 진행되면서 운동의 부활을 상징했다.
- 그러나 투쟁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집권군부세력은 6.29선언을 통해 타도대상이 아니라 개헌협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개헌은 정치권의 밀실협상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머물렀으며, 노태우는 대선에 출마해 집권에 성공했다.
-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1987년의 민중운동의 한계와 교훈을 정리해보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민연정 구상의 구체화와 대중적 선전 실패, 조직적 측면에서는 국분의 낮은 합의 수준과 취약한 대중기반, 보수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정세판단과 과도한 의존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미완의 87년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념을 형성하고 과제를 도출했던, 한편으로는 87년이 만든 제도적 구성 속에서 물질적 기반을 갖춰 온 현재의 민중운동은 87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이념과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복원으로 87년 6월 항쟁과 그에 이은 789 노동자대투쟁을 오늘날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잠정적 문제의식이다. 또한 그 결과는 87년과 달라야 할 것이다.
-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투쟁의 2번째 국면을 열어가는 것이 급선무다. 박근혜의 구속, 박근혜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박근혜 정책의 폐기,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변화의 열망을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상기해야 한다. 광장의 요구가 일터와 삶터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고착화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체계 속에서 착취받고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조직화 시도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단계의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 왜 다시 1987년인가?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연인원 1천만 명이 참가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조선일보 등 보수진영은 소위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보수재편의 명분과 시간을 벌고자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버티기로 나섰고 야당도 좌충우돌, 갈팡질팡할 뿐이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 결의를 압박해 탄핵결의안을 실질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보수진영의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국면을 열었다.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촛불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버젓이 청와대에 틀어박혀 자기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의안을 인용할지, 언제 인용할지, 설령 탄핵된다고 해도 차기에 어떤 정권이 세워질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설령 정권이 교체되어도 그것이 광장에 나온 촛불 주권자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2017년에도 촛불집회가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광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1987년의 경험을 떠올린다. 촛불집회 현장발언과 언론, SNS 등에서 현 국면과 1987년 6월에 대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87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이 대부분이다. 1987년 이전의 경험도 호출되는데, 4.19 혁명에 이은 5.16쿠데타, 서울역 회군과 광주항쟁(신군부쿠데타)까지 거슬러가기도 한다. 학계나 정치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87년 체제’ 같은 개념을 두고 논쟁을 했으며,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87년 헌정체제’를 평가하게 된다.

‘죽 썬 개궐다’는 비유처럼 많은 이들이 1987년을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무엇을 완성하지 못한 것인가?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1987년을 불러오는 담론은 이 지점에서 현재적 쟁점이 된다.

조선일보는 87년 개헌 당시 대선후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5년 단임제로 귀착되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이야 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인명진 목사(87년 당시 국본 대변인) 또한 현재의 촛불은 유신의 잔재를 청소하는 87년 항쟁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는 친박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김종인이나 손학규 또한 광장의 촛불민심은 절대권력 대통령제의 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독재나 유신체제의 적폐라는 것이다.

야당 진영은 야권 분열로 군부가 재집권했던 상황을 현재에 대비해 보수세력 재집권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으나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서 노태우 당선, 지역주의·기득권에 의한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역사가 되었음을 평가한다. 한편 제도적 논의보다 실질적으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교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친 시민 주권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1987년을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에 대해 우리는 “왜 광장에 나왔던 시민은 곧바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미완의 87년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념을 형성하고 과제를 도출했던, 한편으로는 87년이 만든 제도적 구성 속에서 물질적 기반을 갖춰 온 현재의 민중운동은 87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이념과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복원으로 87년 6월 항쟁과 그에 이은 789 노동자대투쟁을 오늘날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잠정적 문제의식이다. 또한 그 결과는 87년과 달라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당시의 역사를 민중운동의 관점으로 쟁점과 평가를 정리해, 향후 민중운동의 과제를 토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 개헌투쟁의 방향모색기: 1985년

※ 주요 사건 연표

- 2.12 총선. 신한민주당(신민당) 돌풍
- 3.2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
- 5.23 삼민투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 6.24 구로동맹파업
- 8.25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창립
- 9월 정기국회에서 신민당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 11.18 파쇼헌법철폐투쟁위, 민정당 중앙정치 연수원 점거 농성

(1) 1985년 신민당의 총선 승리와 개헌특위 제안

1985년 2·12총선에서 “군부통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를 구호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이 된다. 관변야당이나 다름없는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신민당은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직선제 개헌을 공식 당론으로 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다.

2월 총선 결과에 대해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은 내용적 패배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각개편과 당직개편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대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신민당을 체제 내화하는 한편, 학원안정법 제정 시도를 통해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다. 개헌의 민의를 일축하고 “헌 헌법에 의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다른 한편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5월), 구로동맹파업(6월)을 거치며 성장한 학생운동, 노동자·농민운동 등 민중운동세력¹⁾도 상당한 충격과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과정에서 보여준 민주화 여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여야 정치권의 개헌 공방에 대해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80년대에 이어져온 조직과 투쟁노선에 대한 논쟁이 ‘사회운동의 이념과 주체형성’의 문제로 발전되어 나가게 된다.

(2) 민중운동 내 주요 쟁점: 야당과의 관계설정

민중운동 내 개헌운동론의 쟁점은 신민당 및 재야정치세력(민주화추진협의회, 민주헌정연구회, 민주산악회, 민주대학)과 민중운동 세력 간의 관계 설정 문제였다. 야당세력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는 문제가 주요한 측면이라면 부차적인 측면은 두 세력의 연대를 어느 선에서 확립하느냐는 문제였다. 이는 개헌운동 자체가 신민당 및 재야 정치세력이 주도적으로 창출한 운동양식이었고, 민중운동 세력은 불가피하게 이들 정치세력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은 대부분 이민우를 총재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양김씨(김영삼·김대중)가 장악한 신민당²⁾ 및 재야정치세력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으로 파악했다.

(3) 민중운동의 개헌투쟁론: 형성과 전개과정

1) 변혁적 이념을 가지며 노동자·농민·학생 조직을 기반으로 한 운동들로, 여러 문건에서 민족민주운동, 민중·민주화운동 등으로 호명되는데 여기서는 현재적 용법에 따라 민중운동으로 통칭한다.
2) 신민당 및 재야세력들에게 민주화란 국민에게 ‘정부의 자유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으로, 1979년 10·26 사건 이후 신민당, 공화당, 유정희 등이 국회에서 합의했던 대통령직선제를 회복하는 것임. 보다 정확히는 빼앗긴 합의를 되찾는 것이 개헌이고 그 방향은 직선제 개헌임. 동교동계(김대중)는 대통령직선제 관철을 타협할 수 없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고, 상도동계(김영삼)는 정부·여당이 민주화 일정을 밝히고 개헌에 동의할 것을 제1 목표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선제이지만 내각책임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

① 노동운동

1985년 8월 25일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은 창립대회 결의문에서 “직선제를 포함한 전 국민적 민주개혁투쟁에 총력을 다한다”고 선언한다. 당시 민중운동 세력들 사이에서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던 상황을 타개하고 민주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현재의 민중적 요구는 파쇼적 군부독재 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적·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중적)민주제 개헌은 현 군사독재를 타도함으로써만 쟁취될 수 있으며, 신민당 및 재야정치세력과 연대하되, 그 연대는 민중운동이 우위에 서서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리는 더욱 발전한다. 9월 19일자 서노련 신문에서 대통령 직선제에 그치는 개혁투쟁이 아니라 민중이 참여하는 헌법제정민중의회를 소집해 거기에서 새 민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제 개헌론 → 민중·민주개혁론)

민중·민주개혁론은 보다 구체화된다. 10월 5일, 4개 노동운동단체들(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 서노련)이 연합하여 삼민헌법(민중·민주·민족 통일헌법)쟁취론을 천명한다. 슬로건은 아래와 같다.

민족통일 가로막는 분단헌법 철폐하고 통일헌법 쟁취하자!

민중을 수탈하는 예속경제 철폐하고 자립경제 수립하는 민중헌법 쟁취하자!

노동자·농민·서민·학생을 탄압하는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 서노련신문 제4호 86년 10월 28일

이는 신민당이 요구하는 직선제개헌이 노동운동의 개혁투쟁 목표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삼민헌법쟁취 투쟁론은 민주제 개헌론과 마찬가지로 현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중의 제권리를 쟁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매판헌법, 분단헌법 등의 철폐를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주장해 민중운동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직선제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점도 차이가 있다. 삼민헌법쟁취론은 이후 일관된 하나의 개혁투쟁론으로 노동운동권의 주요 부분에서 자리잡아 나갔다.

② 학생운동

1985년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과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가 조직되면서 학생운동에서도 개혁투쟁이 시작된다. 노동운동과 달리 논리적 정합성을 둘러싼 내부논

쟁과 그에 따른 방향전환이 두드러진다. 9~10월 중순 민주제개헌투쟁, 10월중순~11월중순의 삼민헌법쟁취투쟁, 86년 2월까지 파쇼헌법철폐투쟁이라는 변화과정을 거친다.

파쇼헌법철폐투쟁론은 삼민헌법을 쟁취하는 것은 군사독재 타도투쟁, 즉 현행 파쇼헌법 철폐투쟁 과정에서 계기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전학련-삼민투 산하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14개 대학, 191명)는 11월 18일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 연구수원 점거 농성을 벌인다.

한편 '반제론'을 주장하던 학생운동 중 일부는 개헌은 미제의 식민지 파쇼체제 안정화에 다름아닌 것으로, 부르주아 민주세력들의 권력투쟁을 위한 정치놀음으로 보았다. 당면 투쟁은 미국의 한국시장 개방요구나, IMF, IBRD 대회를 초점으로 하여 반미자주화투쟁에 집중할 것을 주장한다(개헌투쟁 무용론). 이러한 '반제론'의 일부는 86년 3월 이후 '직선제 개헌'으로 입장을 급진화하면서 학생운동의 다수파가 된다.

③ 재야운동: 민통련, 민청련, EYC(기독교청년협의회)

1985년 2.12 총선을 계기로 재야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성과 통일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1985년 3월 29일, 80년대 재야운동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민협>과 <민주통일국민회의>가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 결성된다(의장:문익환). 민통련은 신민당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전두환 정권 퇴진이라는 전제 하의 민주제개헌'을 개헌운동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한다. 즉 민통련의 민주화 일정은 '군사독재 퇴진(촉구) - 민주제 개헌 - 민주정부 수립'이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은 개헌국면을 '권력교체기라는 특수국면'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운동의 공간 확대와 대중적 확산을 꾀할 수 있는 적극적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통련과 유사한 민주제 개헌투쟁의 전개를 기본 노선으로 천명한다.

<기독교청년협의회(EYC)> 등 개신교청년운동은 운동의 목표를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군부독재 종식과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확립'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개헌투쟁을 간과하면 대중의 정서를 무시하고 정치세력에게 대중을 방기해 두는 것이므로 실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제시와 슬로건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4) 민정당의 개헌특위 거부와 국면전환

이렇게 1985년 민중운동은 개헌론에 대한 독자적인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군부독재 퇴진(타도 혹은 종식)이라는 단기적 목표에서 야권과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내 일부 세력은 개헌투쟁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전학련, 삼

민투 등 당시 공식적 학생운동 대표세력은 ‘파쇼헌법철폐투쟁’을 행동으로까지 감행한다. 종교계 민주화세력과 민통련 등의 재야 민주화세력은 개헌투쟁의 단초적 실천활동에 들어갔으며, 청년운동은 개헌투쟁 무용론과 민주제 개헌론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이었다.

이 와중에 85년 12월 민정당은 신민당의 개헌특위 설치안을 거부한다. 그로 인해 여당과 야당 및 민중민주 세력의 일대 접전 형국이 조성되면서 민중운동은 개헌운동의 방향성에 있어 혼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실천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3. 개헌투쟁 고조기: 1986년 상반기

※ 주요 사건 연표

- 1985.12. 민정당 개헌특위 결의안 거부
- 1986.2.4 전학련 파쇼헌법철폐 신년 투쟁대회 및 개헌 서명운동 추진본부 결성대회
- 2.12 신민당, 민주협 개헌서명운동 시작
- 2.24 3당대표 회동 (89년 헌법 개정, 정부형태 국민투표 선택, 헌법특위 설치)
- 3.7. 김대중, 김영삼, 이민우 공동 발표 (86년 개헌, 지자체 시행, 87년 가을 대선)
- 3.11 NCC 시국선언문 발표 (직선제 개헌 요구)
- 3.23 신민당 ‘개헌추진위 부산지부 결성대회’
- 3.30 ‘개헌추진위 전남도지부 결성대회’
- 4.5 ‘개헌추진위 대구시 경북지부 결성대회’
- 5.3 ‘개헌추진위 경기도 및 인천시지부 결성대회’

(1) 투쟁의 대중적 고양

민정당은 개헌특위를 거부한 이후 반발을 탄압하려고 한다. 당시 운동의 대중적 역량은 학생이었다. 86년 2월 ‘86년 전학련 파쇼헌법철폐 신년투쟁대회 및 개헌서명운동 추진본부 결성대회’ (15개 대학 1천여명)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정국을 경색시킨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1월부터 시작된 종교계,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3월부터 신민당, 민주협, 민통련의 ‘개헌서명운동’, ‘개헌헌판식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헌헌판식운동은 신민당의 의도와 통제를 벗어나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대중적 투쟁을 형성한다.

〈개헌헌판식운동과 5.3인천항쟁〉

신민당은 85년 12월 개헌특위 설치에 실패하자, ‘1천만명 개헌서명운동’과 ‘개헌헌판식 집회’ 등의 원외투쟁에 돌입한다. 이는 개헌운동의 대중적 투쟁국면을 창출하였다. 폭발적인 대중열기로 개헌헌판식 집회는 신민당의 제한적이고 행사 중심적 의도를 뛰어넘어 헌판식 집회를 대중적 정치운동의 광장으로 발전시킨다.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대중의 숫자만도 연인원 약 50~70만 명에 달했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 골고루 참여했다. 학생 이외의 노동자, 농민, 도시서비스직 종사자 등 하층계급의 폭넓은 참여가 있었다. 광주집회 때 69명이 연행되는데, 대학생은 12명, 무직 24명, 음식점 및 다방 종업원 12명, 운전기사 등 근로자 4명, 산업 및 회사원 10명, 농민 7명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의 요구는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 요구(청원)를 뛰어넘어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민주헌법 쟁취하자”로 결집되었다. 반미투쟁은 광주 미문화원 앞 시위에서부터 고개를 들어, 대구에서 뚜렷해지고, 인천에서는 주류를 형성한다. 워커 미국대사는 신민당에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한다.

그 결과 신민당과 민중운동의 분리현상이 나타나는데 5.3 인천집회 때 특히 선명해진다.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민당의 개헌추진위 경인지부 결성대회와 상관없이 학생들로 구성된 1만 대오는 12시부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오후 1시부터는 본격적인 가두투쟁을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시위대가 민정당 사무실에 화염병을 투척, 방화했고, 오후 4시경에는 주안 사거리에서 경찰차를 탈취해 경찰병력에 밀어붙이는 격렬한 시가전이 있었다. 시위는 밤 10시경까지 시내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방향을 잡는다. 신민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김영삼·김대중 역시 일단 항쟁주체와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데 혈안이 된다. 김대중의 ‘비반미, 비폭력, 비용공’이라는 기준이 등장한 것도 이 때다. 민중운동은 민통련의 문익환, 이부영, 장기표 등과 서노련의 김문수 등이 모두 구속되며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버스정류장을 바리케이트로 설치하는 시위대(좌), 당시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우)

(2) 학생운동 : 민민투-자민투

① 민민투의 제헌의회(CA) 소집론

86년 5월 이후 NL의 입장을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적 운동관이라고 비판하면서 ‘파쇼하의 개혁 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면에 부상한다. 학생운동권에서는 자민투에 대립되는 민민투를 조직한다. 민민투는 처음 ‘헌법제정민중의회(CPA)’ 슬로건을 제시했으나 CA론으로 전개되면서 CA노선의 학생운동 투쟁조직이 된다. 입장은 아래 표와 같다.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국면 (체제변혁의지), 혁명적 정세(경제모순 첨예화, 지배구조 분열, 대중투쟁 격화) · 당면 혁명은 어떤 세력, 어떤 계급이 투쟁을 지도하는가에 따라 두 방향으로 귀결될 것. 1) 노동자계급 헤게모니에 의한 ‘혁명의 결정적 승리’ 2) 자유주의부르조아지의 헤게모니에 의한 ‘혁명의 유산, 자유주의적인 개혁’
당면 투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민주헌법쟁취 → CPA → CA · 제헌의회소집 투쟁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 민중의 정치적 행동을 통일시키는 유일하고 올바른 경로. 헌법문제는 헌법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민중적 주권의 행사방식 문제. · 제헌의회 소집은 민중의 군사정권에 대한 혁명적 투쟁의 선언이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화 선언이며, 자유부르조아지의 타협과 개량적 음모에 대한 폭로.

② 자민투의 직선제 개헌론

투쟁이 고조되는 5월이 되면서 학생운동의 자민투(‘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로 대표되는 NL(민족해방)노선은 그동안 개량적이라는 비판으로 제대로 제기되지 못한 직선제 개헌론을 전면화 한다. ‘식민지’ 한국 땅에서는 개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직선제 쟁취를 민중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면, 직선제라는 제도를 혁명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세와 과제에 대한 주요입장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헌국면→ 제국주의의 한반도 권력재편기 · 변혁의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 준비기
당면 투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환 세력의 고립을 통해 파쇼지배질서를 동요, 약화시키고 미제의 파쇼 체제재편을 서두르도록 강제하는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민주화 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 · 개헌투쟁은 반파쇼민주화 투쟁이며 민주적 제권리 투쟁

③ 헌법제정민중회의(CPC)론

86년 5월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일부에서 꾸준히 존재, 성장해온 노선이다. 초기 민민투의 CPA와 유사하다. CPA의 일부가 CA를 비판하며 독자적 변혁이론체계를 갖춘 CPC계열로 정착된다. 현재의 개헌 국면을 “군사파쇼가 중간층 포섭을 위해 개량 전술을 향해 치닫는 시기”로 인식하고 지배세력이 기층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CA의 노선에도 비판적이었다. “일방적 폭로와 견제로 혁명과 개량을 민중에게 구별시키고 혁명적 길을 제시한다는 초조감 속에서 제휴대상인 야당의 무력화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야당세력 내부에 존재하는 진보적 측면에 대한 지지와 반동적 부분에 대한 철저한 폭로”를 통해 민중 진영의 영향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당시 변혁론 논쟁에 대한 사후 평가³⁾

NL은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관점과 활동가의 관점을 서로 배타적으로 정립했다. 따라서 전술은 대중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그것을 체계화, 정식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초기에 개헌투쟁 무용론을 전개하다가 85년 하반기 ‘직선제 개헌론’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NL의 투쟁 3대 영역론(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민주화 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은 각 투쟁들 사이의 연관과 상호전화의 문제가 간과된 채 투쟁들의 나열에 머물 뿐이다. 민주화투쟁이 자주화투쟁으로 어떻게 전화되는지 해명되지 않는다. NL의 대답은 제국주의가 근원적인 적이므로 투쟁을 하다보면 투쟁의 성격이 전화된다는 것이다. 6월 민주화투쟁에서 나타난 직선제 개헌론을 넘어서는 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요구는, 개헌이 반제투쟁의 계기라는 NL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입증해준다.

한편 CA의 제헌의회 소집 슬로건은 투쟁과정에 무력했다. 변혁운동 내 선도적 정치투쟁론의 한계를 반복했고, 당시 전선의 성격을 추상적으로 이해해 정세에 적합하지 않은 전술슬로건을 제시했다. 무차별한 가두대중에 변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계급역관계 속에서 특정한 계기를 포착하여 풍부하게 변혁의 과제를 설명했어야 했다. 결국 대중의 사회심리적 조건과 정치전선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고립되어 버린다. 특히 87년 6월 투쟁은 ‘국본’의 구도를 뛰어넘어 전개되었음에도 대안적 정치적 태도를 정립하지 못했던 전술적 경직성은 정책능력의 부재에서 기인했다.

(3) 노동자·농민·재야민주화 운동

3) 87년 이후 형성된 PD그룹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현실과 과학』 그룹의 전효관(1990)의 평가를 소개한다.

① 노동운동

서노련은 86년 상반기 임금인상 시기를 맞이하여 개헌투쟁을 임금투쟁과 병행하여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86년 2월 7일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도 서노련과 연대를 설정한다. 임금인상 시기의 정치투쟁을 “생활임금 쟁취와 삼민헌법 쟁취”로 이끌어온 서노련과 인민노련은 5월 들어 본격적인 개헌투쟁에 돌입한다. 신민당 개헌헌판식 집회를 신민당의 의도와는 달리 “민중들의 손으로” 차원 높은 반군사독재투쟁으로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5.3인천항쟁의 여파로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된다.

한편 5.3인천항쟁에서 ‘반제반파쇼 노동자 투쟁위원회(반반노투)’ 명의를 유인물도 살포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서노련과 인민노련을 중심으로 하는 ‘삼민헌법 쟁취투쟁론’과 반반노투의 ‘헌법제정민중회의소집투쟁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② 농민운동

농민운동은 86년 운동방향을 기존의 농민권익 쟁취투쟁에서 한 단계 높여 ‘군사독재 종식’과 ‘반외세 민족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헌운동을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계기적 투쟁으로 설정한다. 농민운동의 개헌투쟁은 86년 상반기에 중심투쟁이 되지 못했으나 “농민운동의 정치투쟁화의 매개가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③ 재야민주화운동

민통련은 85년에 설정한 민주헌법쟁취투쟁을 전개했다. 주요 목표는 군사독재의 퇴진과 아울러 민주헌법의 쟁취이고, 실천적 과제는 군사독재와 현행 헌법의 반민주, 반민중, 반민족성을 폭로하며, 군사독재의 퇴진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대안은 민주헌법과 민주정부의 수립을 선전하며, 강력한 연대운동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대통령직선제를 주 슬로건으로 하자는 견해를 비판하고, 삼민헌법에 대해서도 이념적 목표를 당면투쟁의 슬로건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주장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진 여러 갈래로 통일을 지향하는 ‘열린 틀로서의 헌법’을 주장한다.

4. 개헌협상 실패와 호헌, 87년 6월 항쟁

※ 주요 사건 연표

- 1986.5.27. 민정당 헌법특위참여 선언 (연내개헌 추진)
- 5.29 노태우-이민우 회담
- 6.3 전두환-이민우 회담
- 6.6 부천시 성고문 사건
- 6.9 노태우 ‘개헌 5원칙’
서울대생 200여 명, ‘이원집정부제 기도 분쇄 및 민족민주운동 탄압 규탄대회’
서울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황이수군, 신민당 중앙당사 농성 (직선제 개헌 관철, 신민당 일각 내각책임제 주장에 대한 신민당 공개 입장 천명 요구, 서울대생 761명 개선제 개헌 서명부 전달)
- 6.19 문익환 목사 구속 기소
- 6.24 임시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민정, 신민, 국민 공동발의)’ 의결
- 6.30 서울대 민민투, 자민투 상부조직원 6명 검거, 39명 긴급수배.
- 7.30 헌법개정특위 발족
- 9.6 <월간 말>, 부천시 성고문사건 언론 보도지침 폭로
- 9월말 신민당 헌법개정특위 탈퇴
- 10.28 건대항쟁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을 ‘공산혁명분자’로 몰아 1,525명 연행, 1,290명 구속)
- 10.30 평화의 댐 건설 발표 (북한이 금강산댐 터뜨릴 것이라 전쟁분위기 조장)
- 12.24 이민우 구상 발표 (선민주화조치- 후내각제 개헌 찬성)
‘직선제개헌파’(YS,DJ) 반발
- 1987.1.12 전두환 신년 국정연설 (여야 합의 개헌 못할 경우 중대결단 내릴 수 있다)
- 1.15 박종철 열사 사망,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 2.7/3.3 ‘박종철군 추모대회’/‘고문추방 민주화대행진’
- 4.7 YS, DJ 등 74명 국회의원 신민당 탈퇴 선언
- 4.13 호헌조치 (개헌논의 중단, 88년 2월 새 정부 선출 뒤 개헌)
- 4.21 통일민주당 창당
- 5.20 청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종철 고문사망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발표
- 5.27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본) 결성
- 6.9 이한열,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음
- 6.10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규탄과 호헌철폐 국민대회’ 24만 명 참여
- 6.10- 6.15 명동 성당 농성
- 6.18 ‘최루탄 추방대회’ 50여만 명 참여, 경제 시위 통제 포기

- 6.26 '국민평화대행진 140여만 명 참여.
- 6.29 노태우, '6.29선언'

(1) 내각제 협상의 실패와 4.13 호헌조치까지

86년 3월 14일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성명을 통해 소련의 지역분쟁개입, 우방국들의 미국정책 동참과 민주화혁명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인권을 중시하고”, “친소좌익독재정권이건 반공우익독재정권이건 어떤 형태의 독재정권에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마르코스가 축출된지 3주 만에 나온 이 성명은 레이건의 대외정책, 즉 대소 봉쇄과 신개입주의 노선의 신호였다.

86년 4월 14일 조지 솔츠 미국 국무장관은 캔자스 주립대학 연설에서 극우와 극좌를 지적하면서 민주적인 중도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세력을 권장’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경제원조, 안보지원, 외교개입 등의 수단이 구사될 수 있다고 밝힌다. 시거 미 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민주화유도정책’을 보다 상세히 해설한다. 이 때의 민주화란 결국 미국의 전략에 부합되는 “비급진적인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발맞춰, 민정당은 의원내각제(혹은 이원집정제)로 자신이 주도하는 개헌을 통해 보수대타협 방안을 추진한다.⁴⁾ 86년 6월 9일 노태우의 ‘개헌 5원칙’에 “정부 권력을 3권 분립 차원 이상으로 넓혀 분산”시킨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그 구체적 표현이 “이민우 구상”이었다. 신민당 총재인 이민우가 7개항의 민주화 조치가 선행되면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직선제 개헌파’인 김영삼·김대중의 반발을 불렀고, 내분으로 번지면서 신민당은 분열된다.⁵⁾ 이렇게 직선제 개헌에 거리를 둔 미국의 입장, 야당의 분열, 초강경 탄압에 자신감을 얻은 민정당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다.

(2) 국본의 결성배경과 한계

4.13 호헌조치를 단행한 전두환 정권은 비타협적 야당에 노골적 탄압을 가했다. 이에 제도권 내 야당 정치인까지 포괄되는 범국민전선 형성이 절박해지게 되었고, 극비의 작업 속에서 5

4) 5.27 헌법특위참여 선언을 통해 대중적 장외투쟁이 원내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야당의 태도변화도 중요하게 작용함. 김대중의 사면과 복권을 전제조건으로 하던 방침을 철회하고, 개헌특위의 과제로 바꿔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으로 가는 것이며, “정치인이 개헌을 주도하자는 것”(김영삼 5.27 선언)을 의미했음. 여기에는 인천 5.3항쟁 후 야권과 분별정립되는 민중운동에 대한 위협, 미국의 직선제개헌에 대한 부정적 반응, 정권의 강경책 전환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

5) 당시 신민당 실세는 김영삼(신민당 상임고문), 김대중(민추협 공동의장)이었음. 이민우는 총재이지만 실권이 없었는데, 개헌협상이 교착되면서 김영삼을 총재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민우 구상은 이러한 흐름에 이민우가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성격이 있었음. 여기에 이철승 등이 이민우 구상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결국 87년 4월 신민당 소속 의원 90명 중 74명이 탈당하게 됨.

월 27일, 민통련,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성, 민주협과 통일민주당까지 포괄되는 광범위한 역량이 결집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을 결성한다.

국본은 6월 항쟁을 주도하게 되나, 형성 때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결성 당시 협의기구로 출범해 대중에 대한 실질적 조직기반이 없었다. 예컨대, 국본의 주요구성원은 계급, 계층의 대중적인 조직을 대표하는 인사가 아니라 국민적 상징성을 갖는 인사로 구성되었다. 둘째, 국본은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당면 목표 외에 이념적 통일성이 없었다. 이는 국본이 보수야당인 민주당부터 민통련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국본은 이후 7,8월 노동자투쟁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 그 실체와 요구되는 위상 사이에서 괴리를 보이게 된다.

(3) 6월 항쟁과 6.29 선언

1987년의 항쟁은 박종철 고문사망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박종철의 사망은 86년 5.3 인천항쟁 이후 전두환 정권의 초강경 탄압이라는 과정이 만든 사건이었다. 2.7 추도대회와 3.3 고문추방 민주화대행진(평화대행진)도 대규모 경찰 병력으로 봉쇄한 전두환은 4.13 호헌 조치를 통해 개헌정국의 조기 종결을 꾀했다.



6월 9일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 열사(좌)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규탄과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모인 인파들(우)

그러나 사태는 예상할 수 없게 전개된다.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박종철 고문사망 사건이 은폐 조작되었다는 폭로가 전국을 뒤흔든다. 6.10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규탄과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하루 앞둔 6월 9일 이한열이 중태에 빠진 것은 항쟁의 불꽃을 활화산으로 승화시킨다. 6.10 국민대회 이후 자발적으로 발생한 명동성당 농성은 벵타이 부대의 등장과 같은 시민들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면서 6월 항쟁의 향방을 결정지었다.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가투가 발생했다.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으나, 시민들도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거나 경찰에 쫓기고 있으면 피신을 도와주고, 경적을 울리거나 고가도로에 차를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40여 만 명이 참여한 6.26 항쟁은 정권의 진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27, 28일도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6월 29일 오전 민정당 대표인 노태우는 민정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자신의 구상을 대통령 각하께 건의드릴 작정이라면서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아래 8개항으로 구성된다.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6.29선언이 나오자 국본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는 오로지 민주화를 위해 온몸으로 싸워 온 전 국민의 위대한 승리로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발표한다. 양 김도 크게 환영했다.

5. 87년 7-9월 : 6.29 이후 노선분화와 노동자대투쟁

※ 주요 사건 연표

- 1987.6.30 통일민주당 〈헌법개정안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7.5 현대엔진 노조 결성
- 7.16 현대미포조선 노조결성 신고서류탈취 사건
- 8.4 국본 개헌요강 발표
- 8.8 현대그룹노조협의회 결성
- 8.11 노동부 장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특별담화’
- 8.19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 8.21 전두환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우리 사회에 좌경 사상을 가진 체제 파괴 분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사회 표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8.22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사망

- 8.27 국무총리, 좌경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담화문 발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급진좌경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
- 8.28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영결식

(1)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폭발

6.29 선언 이후 도시 가두시위는 급격히 줄었으나 노동자 투쟁이 폭발한다. 87년 민중항쟁은 6월이 끝이 아니라 9월까지 지속된 것이다.

① 7·8월 노동자 대중투쟁기

민주노조결성과 파업투쟁을 통해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물적 토대를 근거부터 흔든 대중투쟁이 전개된다. 6·29부터 8월 초순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투쟁이 일어난다. 울산, 부산, 창원 등 중공업부문 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이 두드러진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조 결성을 계기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쟁취투쟁으로 확대되고 ‘현대그룹노조협의회’ 결성으로 모아진다. 8월 중순에는 현대그룹 6개 사업장 4만 노동자들이 중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가두시위와 행진을 통해 경찰의 최루탄 난사를 무력화시킨다.

8월 초순부터 8월 말경은 파업투쟁이 정점에 이른다. 울산의 투쟁은 부산과 창원으로 확산되고, 사실상 총파업과 같은 기세로 발전한다. 업종별로는 섬유, 전자로, 지역으로는 경남 지역에서 경북, 구미, 경인지역으로, 규모면에서는 재벌계열사에서 중소기업체로 빠르게 번져간다.

이렇게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3,311건의 쟁의가 발생한다. 하루 평균 40여건의 파업이 매일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 수는 당시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333만 명의 약 37%인 122만 명에 달한다.



8월 19일 울산 거리를 가득 메운 현대 7개 노조 노동자들(좌)
2년간 봉쇄된 노조 사무실을 탈환한 청계피복노조. 노동3권·8시간 노동·최저생계비 쟁취 등의 구호가 보인다(우)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평가(안암연구실, 『87년 선거 평가와 전망』)

	의의	한계
투쟁내용	3가지 요구(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민주노조설립과 어용노조 퇴진)가 주를 이뤘음. 생존권투쟁에서 민주노조설립투쟁으로 진일보한 것.	임금인상 투쟁을 최저생계비 쟁취투쟁으로, 민주노조건설요구를 노동계급의 지역적·전국적 노조건설운동과 노동3권 및 노조의 정치활동자유 쟁취투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단위사업장별 투쟁에 머물.
투쟁형태 조직수준	파업·농성·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시작해 조직을 형성한 후 협상에 돌입하는 전술적 능동성 발휘. (선투쟁 후협상) 조직화된 공세적 가두시위. 지역별, 그룹별, 산업별 동맹파업.	실질적·투쟁적 연대를 통해 단위사업장을 넘은 상층조직으로까지 발전하진 못함. 이후 국면에서 각개격파.
주체형성	중공업부문, 대규모 사업장, 남성노동자가 운동의 중심으로 부각. 파업으로 단련된 선진적 노동자가 광범하게 창출됨.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지도력이 허약했음. 전술형태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함. 아울러 대중도 총체적 계급의식에 이르지 못함.

② 9·10월 - 민주노조파괴, 어용화, 운동의 급속한 냉각

8월 말부터 쟁의 타결이 쟁의 발생을 넘어서면서 하강국면에 들어간다. 7·8월 투쟁이 자본가와 국가에게 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을 묻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의사를 묻는 것이었다면, 그 대답은 '9월 대탄압'이었다. 8월 22일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의 죽음은 노동자투쟁이 총자본과 폭력적 국가기구에 맞서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은 선언에 그쳤고, 일반시민의 참여는 극히 적었다. 정부는 기세를 몰아 대우자동차, 현대중공업을 진압하고 전경련을 통해 노동자 투쟁을 '순수임금투쟁을 넘어선 인륜파괴 행위'로 규정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이러한 총 공세에 민중운동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9월 대탄압기에 투쟁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전개, 귀결된다. 첫째, 대중적 기초와 확고한 활동가 그룹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대부분 무력화된다. 6.29선언 이후 설립된 신규노조, 중소기업의 경우다. 둘째, 핵심사업장의 경우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약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는 진압 당했지만, (주)통일의 경우에는 노조위원장 등 6명이 구속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두진출 등을 통해 탄압을 여론화하고 노동자의 힘을 전국적으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국본 농성을 시도하는 등 모범적 투쟁을 벌인다. 셋째, 선진적 노동자의 투쟁은 있었으

나 대중투쟁이 이뤄지지 못해 농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 10월 15일 국민운동본부농성은 (주) 통일 등 부산창원지역 6개 사업장 노동자가 참여해 선거의 장막에 가려져있던 노동자탄압을 부각시켰다. 또한 노동운동탄압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민족민주운동권에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적었다. 노동운동 자체의 연대조차 초보적 수준이었다⁶⁾.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투쟁〉

대우조선은 1985년 이후 과잉 중복투자와 세계 조선 산업의 퇴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노동자를 대규모로 감원, 징계, 해고했으며 3만여 명이었던 노동자 수는 1987년에는 1만6천여 명으로 줄었고, 임금은 사실상 동결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87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면서 8월부터는 3천여 명이 파업농성에 돌입하지만 회사는 교섭을 거부한다. 이에 노조는 8월 14일부터 거리로 진출해 연일 가두시위와 차량시위를 벌인다. 8월 22일 옥포아파트 사거리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은걸음으로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직격 최루탄을 난사했고, 백골단은 흩어지는 시위대를 골목 구석까지 쫓아가서 짓밟고 옷을 발가벗기는 등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 와중에 스물한 살의 대조립부 외업반 이석규 열사가 직격최루탄을 맞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운명한다.

이석규 열사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노동자들은 대우병원 영안실 문을 용접으로 봉하고, 24시간 시신을 사수한다. 이소선 어머니, 변호사 노무현·이상수 등 각계 인사들과 국민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장례준비위원회가 발족해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하고, 장지는 망월동 묘역으로 합의한다. 8월 28일, 노동자, 지역주민 등 2만여 명의 애도 속에 대우조선 운동장에서 영결식이 거행된다. 노제를 지낸 뒤, 영구차를 앞세우고 망월동 묘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시신을 탈취한다. 주변 야산에 잠복하고 있던 2천 5백여 명의 전경과 백골단이 몰려나와 장례집행위원 등 재야인사들의 차와 동문인 광주직업훈련원 출신들이 타고 있던 버스 창문을 박살내고 이들을 집단구타하며 강제 연행한다. (연행자 중 이상수, 노무현, 박용수는 구속된다.) 이어 경찰은 유족 3명만을 태우고 남원 선산에 가 열사의 시신을 매장한다.

영결식 날 오후 6시 전국적으로 '고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추모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5만여 명 경찰의 원천봉쇄로 성사되지 못하고 전국에서 밤늦게까지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진다. 전두환 정권은 이날 전국적으로 개최된 추모제와 관련하여 933명을 연행했고,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으며, 이소선 등 10여 명을 수배한다. 또 대우조선에서는 해고된 3명 외에 추가로 7명에게 몰래 잠입한 형사계장을 구타했다는 혐의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한다.

6) 당시 노동자 운동의 뼈아픈 패배와 각성은 전노협 건설 등 이후 노동자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1988년에 만들어진 〈총파업가〉의 가사를 보자. ‘팔칠년 칠팔구 투쟁을 동지여 기억하는가 /거제에서 구로까지 족쇄 깨고 외쳤던 날을/우리는 빠져린 각성에 드디어 깨달았노라/천만형제 단결 없인 노동해방없다는 것을 /나가자 형제여 방방곡곡 대동단결로/말하라 형제여 총파업투쟁으로 말하라(후략)’



고 이석규 열사 영결식 행렬

(2) 노선 분화의 조짐: 군부독재 종식투쟁론과 군부독재 타도투쟁론

6.29 선언 이후 발생한 노동자 대투쟁에 위기감을 느낀 것은 집권세력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 노동자 투쟁이 극우강경세력을 자극해 직선제를 무산시킬까봐 우려했다. 여야 정치권은 개헌협상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조속히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많은 사항을 쉽게 양보한다. 선거 경쟁이 가시화되고 후보단일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군부독재타도 투쟁이 김영삼과 김대중 중에서 누가 후보로 적합하냐는 인물비교 문제로 환원된다.

통일민주당의 입장은 ‘선거혁명론’인데, 김영삼 계열은 여야민주화 공동선언을 전제로 하는 반면 김대중 계열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여당(전두환-민정당)에 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입장의 분기가 드러난다. 민중운동 역시 입장이 분화된다.

① 군부독재 종식투쟁론 - 선거를 통한 민선민간정부 수립 투쟁론

군부독재 종식투쟁론은 현재의 주체역량 상 군부독재를 물리력으로 타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선거에서 군부독재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새로운 민간정부를 토대로 반군부 독재 투쟁을 완수하자는 입장이다. 서대협-전대협의 입장이자, 국민운동본부, 민통련 등 재야세력 노선의 기초가 되는 입장이다.

서대협은 6.29 이후의 정세를 “미제가 노태우를 대통령에 앉히려는 파쇼체제 재편음모”의 실현과정이고, “노태우가 승산이 없으므로 김영삼을 포섭해, 보수대연합 획책음모”를 관찰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초기 ‘범국민 과도정부쟁취 투쟁론’을 주장하는데, 장황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취할 구체적 조직,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CA 등의 ‘좌익블럭’에 대해 폭로의 대상을 자유주의적 부르조아(민주당)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다. 대신 국본을 ‘각계 각층 대중역량을 바탕으로 한 명실상부한 ’국민전선‘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8월 4일 국본에 가입하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8월 19

일 결성한다.

9월 이후 서대협은 군부독재퇴진을 선거를 통한 과정으로, 과도내각은 선거 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으로, 차기정부는 민선민간정부로 노선을 수정한다. ('선거를 통한 민선민간정부 수립 투쟁론'). 이에 반발해 서대협 내부는 분화된다. 6월 투쟁 때부터 서대협의 '직선제로 독재타도' 구호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각 대학 총학생회 산하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독자적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던 그룹들이 별개의 서울지역청년학도비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이후 후보단일화 운동에 참여한다.

② 군부독재 타도투쟁론

군부독재는 선거가 아니라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타도될 수 있으므로 비타협적 반군부독재 전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자는 입장이다. 인민노련 등의 '범민주 과도정부쟁취 투쟁론'은 개헌협상과 헌법을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전국적 노동자 정치조직과 그를 축으로 하는 민중운동연합이 혁명적 방법으로 군부정권을 완전 타도할 것을 주장한다. 실질적 민주화, 새로운 정부를 담보하는 과도정부를 구성해 새로운 자주적 민주정부(민중민주주의 정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선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자주적 민주정부의 강령적 내용을 선전-선동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보다 더 급진적 판본이 학생운동 CA그룹의 '임시혁명정부론'이다. 민주화는 군부독재와 타협, 선거에 의해 달성될 수 없으므로 독재를 완전히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자주적민주정부 또는 민중민주주의정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반동 부르주아'와의 타협을 설교하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의 동요성과 기회주의성을 철저히 폭로하여 이들을 고립-무력화시키고 혁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면적으로는 '파쇼 하 개헌을 분쇄하는 국민투표 거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혁명적 민주주의 진영' 구축을 조직적 과제로 제기한다. 전국적 정치신문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제시, 9월 20일 <선봉>을 창간한다.

(3) 개헌협상

통일민주당은 6월 30일 <헌법개정안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협상을 추진한다. 이때부터 야당은 사실상 국본에서 이탈한다. 신속한 개헌을 위해 개헌작업 진행순서를 '8인 정치회담 → 개헌내용 합의 → 국회헌특 재구성 → 여야 단일개헌안 작성 → 국회 의결'로 합의한다. 이에 개헌협상은 비공식적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회헌특 등 기존의 여야 합의기구는 법안 작성과 같은 실무처리만을 담당하게 된다. 개헌협상의 전 과정은 여야 각 4인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 맡겨진다.⁷⁾ 8인 정치회담은 100여 개에 이르는 쟁점사항을 토의하고 협상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했으나, 주요 내용은 권력구조와 선거규칙

에 집중되었을 뿐, 실질적인 민주화 의제는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제외되었다.

여당은 협상 과정에서 헌법 전문, 선거권 연령 문제, 대통령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통한 여당프리미엄 최대화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 규정’ 삭제(김대중 출마 가능), 부통령제 신설 거부(단일화 방해) 등 김영삼·김대중의 통합 유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야당 또한 양김 중 한명이 크게 타격 입을 가능성이 높은 부통령제, 4년 중임제를 배제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개헌협상의 의제 분석(조계원, 2005)

	이해가 걸린 중심 의제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의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 규정 · 보안처분 요건, 선거연령 · 대통령 임기 · 부칙의 선거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 보장의 확대 · 국정감사권 부활 · 대통령 권한의 축소 ·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선임 방법 · 헌법재판소 신설, 헌법소원 도입

한편 국본은 개헌의 기초가 되는 ‘헌법개정요강’(개헌요강)을 만드는 데도 1개월 이상 소요한다. 7월 13일 국본 산하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만 이는 “개헌협상에 임하는 여야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촉구하는 ‘자문조직’이었을 따름이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조직은 아니었다. 8월 4일 국본 출범 이후 최초로 전국총회가 개최되어 독자적인 개헌요강을 발표한다. 그러나 전국총회의 주요 방침은 ‘선거혁명론’, 즉 야당을 통한 민간민선 정부의 출범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독자적인 개헌요강의 위력은 사실상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본의 개헌요강은 여야 협상에서 무시되었고,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10월 29일 공포된다.

7) 김영삼은 당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 민정당과의 정치협상회의를 2대2로 구성하려 했으나,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한 김대중의 문제제기로 4대4로 변경된다. 여당에 비해 야당은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계파별로 2명씩 대표를 구성하는데 역할분담도, 협상 내용에 대한 준비도 없었다. 실제 협상에서 민주당보다 민정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요인이다.

여야 정당 개헌안과 국본 개헌요강의 비교(김대영, 2006)

분야	항목	민정당 안	통일민주당 안	국민운동본부 안
전문	계승정신	상해임정/3·1운동/ 4·19	상해임정/3·1운동/ 4·19	갑오농민혁명/3·1 운동/4·19/5·18/ 6월항쟁
	특기 사항	없음	문민정치	통일 의지
총장	군의 정치개입 금지	없음	신설	신설
	분단상황의 잠정헌법	없음	없음	신설
기본권	기본권 제한	단체행동권 제한범위를 방위산업체로 한정	단체행동권·공무원 노동3권 제한조항의 삭제	기본권에 유보조항 삭제 또는 최소화
정부	부통령제	없음	신설	신설
	대통령 임기	6년 단임	4년 1차중임	4년 1차중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인정	불인정	불인정
경제	독과점 규제	규제 완화	균형발전 위한 독과점 규제	규제 강화

6. 87년 10월-12월 : 선거국면 노선분화와 군부 재집권

※ 주요 사건 연표

- 10.10 김영삼 출마선언
- 10.11 김대중 출마선언
- 10.12 민통련 김대중 후보 비판적지지 결정
- 10.29 개헌안 공포
- 11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노조 설립 요건 일부 완화)
- 11.5 가톨릭농민회 후보단일화 촉구 회장단 식발단식 농성 돌입
- 11.12 김대중 평민당 창당
- 11.12 백기완 선생 대통령후보 임시 추대위 결성
- 11.18 백본, 민주연립정부 수립 공식 입장 채택
- 11.20 김대중 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진위원회(김추위) 결성
- 11.23 군정종식 단일화쟁취 국민협의회(국협) 결성
- 12.10 백기완-김영삼 회동
- 12.11 백기완-김대중 회동
- 12.16 대통령 선거. 노태우 당선

(1) 후보단일화 논의의 경과

6.29 선언 이후 김대중이 8월 8일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입당할 때까지는 후보단일화에 대한 낙관론이 압도했다. 1983년 김영삼의 단식투쟁으로 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민추협)가 결성되고, 86년 11월 김대중은 불출마선언을 하는 등 양김씨가 서로 양보하겠다는 공언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1956년 대선에서 조병옥과 신익희, 1967년 윤보선과 유진오, 1971년 김대중과 김영삼처럼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킨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87년 선거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오히려 점차 악화된다. 국본은 후보단일화 과정을 양 김씨에 내맡겨, 반군부독재 투쟁의 구심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9월 7일 정책협의회에서 후보단일화 3대 원칙(후보는 단일화돼야 하고, 방식은 합의에 의해, 시기는 가급적 빨리)을 정립했으나, 동교동계 반발로 문서화하지 못한다. 9월 21에 공식입장으로 “10월 5일까지 합의에 의한 단일화”를 발표했으나 촉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대중투쟁의 강화라는 관점으로 국민들에게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일 국민운동본부 주최 <시국대강연회>를 시도하였으나, 김영삼이 불참한다. 그 후 재야세력의 김대중 지지 분위기를 강하게 느낀 김영삼이 10월 10일 기습적으로 공식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날 김대중도 출마의사를 밝힌다. 10월 12일 마지막 토론에서 국본은 ‘단일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합의한다.

이렇게 국본은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단일화를 이루어 낼 수 없고,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다. 거국중립내각과 선거감시운동을 내세웠으나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대선 후 부정선거 규탄을 통해 운동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다.

한편 10월 12일 민통련이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결의하면서 노선분화가 전면화 된다. 민중운동 세력은 ‘비판적지지(비지)’, ‘후보단일화(후단)’, ‘독자후보(독후)’로 나뉘어졌고, 각 노선은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기초로 여러 전술을 남발한다.

(2) 비판적 지지론

① 정세인식

민통련은 ‘민중과 함께 민중적 요구에 기초하여 6월 투쟁을 계승하는 범국민적 후보의 승리’가 필요하고, 그런 범국민적 후보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민족민주운동 진영과 가까운 김대중을 적극 견인해서 군부독재 종식투쟁을 성과있게 전개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투쟁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해 민주운동연합 구축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차기 정부에 참여해 자주적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민주연합정권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세를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친미 보수연합 구축의 시기로 규정하고, 미국이 친미보수야당 김영삼의 집권과 보수대연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배를 항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추상적인 단일화 촉구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김대중 지지)을 통해 세력균형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전대협외의 경우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② 실천

김대중이 출마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인 10월 12일 민통련 중앙위는 비판적 지지를 결정하고 13일 ‘범국민후보로 김대중 고문을 추천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 근거는 첫째, 민중운동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성취하고 보수야당과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연립이나 제휴를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민중운동과 가까운 후보를 선택해 지지하고 진보적 요구와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과 둘째, 민주당 내에서 후보단일화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재야의 힘을 한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통련 등 ‘비지’ 세력은 한편으로 군정종식을 위한 반노태우 투쟁, 다른 한편으로는 양김씨 간 상호비방 금지 및 대동단결 공동투쟁을 제의하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당내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거부하고 동시 무소속 출마 후 대세에 따른 단일화를 주장하고,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힌다. 결국 11월 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후보로 결정되고, 김대중은 11월 12일 평민당을 창당하고 후보출마를 공식화한다.

11월 10일 서대협 신문과 11월 16일 민통련 성명은 “지지세가 약한 후보의 용퇴를 통한 막판 후보단일화”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고, 11월 20일 〈김대중 선생 단일후보 범국민추진위원회(김추위)〉를 결성한다. 이후 노태우 당선 저지 투쟁(“광주학살 및 12.12 쿠데타 진상규명대회”)을 전개하는 한편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을 선전했다. 12월 9일 서대협과 김추위 공동으로 범국민 후보로 김대중 씨를 확정한다는 선포대회를 가진다. 국협과 백선본이 주도한 막판 후보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12월 11일 김대중이 비상정치회담을 정식으로 거부하자 재야 75개 단체는 이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12월 13일 보라매 유세에서 열기는 절정에 이르러 김대중 지지자들은 김대중의 당선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3) 후보단일화론

① 정세인식

미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은 (1) 노태우의 집권 (2) 야권과 군부의 타협 (3) 강경 군부의 쿠데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1)을 일차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2)도 고려될 수 있으나 군부독재가 범국민적 투쟁에 의해 고립화되기까지는 결코 군부독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민중운동이 6.29의 기만성을 정확히 폭로해내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 자유주의 세력이 이탈하고 기층 민중의 광범위한 투쟁도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생존권 요구투쟁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중들의 상태는 선거일정 자체를 거부할 정도는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서라도 군부독재를 퇴진시키겠다는 염원은 갖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민중운동은 아직 대중세력이 아니고, 대중에게 객관화되어 있는 역량도 아니므로 비토권을 행사(반-노태우)하고 도덕적 명분을 세우는 범위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② 실천

민통련의 비판적 지지 결정 이후 민통련 가맹단체 중 6개 단체는 즉각 의문을 표시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한다. 계훈제 씨 등 민통련 회원 44명은 그 날 바로 다수결에 의해 내려진 특정후보 지지표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성명을 발표한다. 10월 21일 가톨릭 농민회(가농)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월 31일 각계 민주인사 122인이 성명을 발표한다.

가농은 11월 5일 회장단 삭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11월 13일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후보단일화 쟁취대회>를 이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11월 23일에 <군정종식 단일화쟁취 국민협의회(국협)>를 결성한다. (청년 분과는 <구속청년학생협의회(구청협)>) 같은 날 국협발기인 중 하나인 백기완이 독자후보로 후보자 등록을 해, 국협 결성식장에서 “독자후보는 공작 정치에 놀아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학생-노동운동에서는 서울대총학생회가 11월 13일에 성명을 냈고, 11월 18일 <노태우 반대 연합전선으로 총집결하자>는 유인물이 노동운동권에서 나온다.

국협은 대중집회를 두 번 개최하고, 기관지 <단결>을 호외를 포함해 세 차례 발행한다. 12월 1일 연세대 집회에서 1,500여명 참석했고 12월 6일 집회에는 단일화 추진 13개 단체와 함께 5,000여명 참석한다⁸⁾(같은 날 대학로에서 백기완 선본 유세에 10만여 명이 참석했다). 부문별로는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서울노련), 인천지역 노동자연합 준비위원회(인준위) 등이 11월 23일 ‘노동자 선대위’를 구성하고 11월 29일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시국강연회’

8) 단일화 추진 13개 단체는 다음임. 국본 노동자위, 국본 부천지부, 노동자선대위, 서울지역 청년학도비상협의회, EYC, 구청협, 기독교도시민선교협, 천주교 도시빈민사목협, 전국대학원생연합회, 전국농민협회, 서울민통련, 가농, 인천 해고노동자 협의회.

를 개최한다. 학생운동은 서울대, 연세대,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단일화투쟁을 결의하고, 12월 1일 양 김씨 집 농성, 12월 2일 양 당사 농성에 들어가 5일에 양당 총재 면담을 한다. 김대중은 대의에는 동의하나 단일화방법으로 합동유세나 TV토론을 고집하였고 김영삼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12월 8일에는 10여 개 대학 학생 1,400여명이 양 당사, 양 김씨 집에서 농성을 한다.

국협은 12월 1일 단일화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재야인사를 포함하는 중재위를 구성한다. 양당 부총재와 회동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노동자 선대위는 협상이 밀실이 아니라 대중이 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13개 단체와 백기완 선본(백본) 공동명의로 비상정치회담이 제안되고, 국협이 이를 추인하게 된다. 그러나 12월 10일 사전협의 없이 백기완 씨가 김영삼 씨와 전격 회동해 비상정치협상안에 합의하고, 12월 11일 백기완-김대중 회동에서 김대중은 거부를 하게 된다. 같은 날 오후 6시 백기완, 계훈제, 김영삼 3자 회동이 있었으나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12월 12일에는 노태우의 부정선거 음모를 분쇄하는 반노투쟁을 벌이기 위해, 야당, 백후보, 국협, 김추위, 13개 단체 연합, 이렇게 6자 연락기구를 결성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러나 민통련과 김추위는 '13개 단체 연합과 국협, 백본은 인정할 수 없다. 모두 국본에 들어가자'고 응답한다.

(4) 독자후보론

독자후보론은 7-8월에 부분적으로 제기되다가 11월 들어서면서 세력을 확보해 간다.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구심,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 일부 운동단체들의 김대중 지지결의에 대한 반발 등이 작용했다. 독자후보론은 (1) 백기완 씨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본부 상층부 (2) 범CA계열(〈선봉〉 그룹) (3)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3가지 흐름이 결합된 것이다. (1)의 독자적 논리는 불분명하므로 범CA계와 인민노련의 정세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정리한다⁹⁾.

① 정세인식

범CA계는 6.29 선언의 “개량성”을 강조한 반면, 인민노련은 “개량적 측면”과 “성과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한다. 민중의 대규모 투쟁이 거둔 첫 승리라는 점에서 성과지만, 부르주아 질서 내 권력 경쟁의 길이 열리면서 민주당과 중간층이 전선에서 이탈하여 개량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범CA계는 당면 전술 슬로건으로 “임시혁명정부와 민중민주공화국 수립”을 내걸고, “자

9) 범CA의 경우 〈선봉〉 1-4호에서 선거전술 논리를 전개하는데, 경인지역 민족민주학생연맹(기관지 〈민족민주선언〉), 성균관대 구속청년학생동지회(기관지 〈일치단결〉) 등이 비슷한 논조를 띤다. 노동운동에서도 출처 미상 혹은 〈민중해방 노동자투쟁위원회〉(민해노투) 명의로 된 유인물이 많다.

유주의자들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려는 모든 세력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민중연합” 결성을 주장하며 선거를 위한 “혁신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헌 국민투표는 반대했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민중후보를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상적으로 투쟁의 빈도와 격렬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적 정치적으로 계급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파쇼와의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선거 시기에 민중정당(일정 타협 하 선전-선동 수행할 합법조직)과 혁명적 민주주의자 연합(정파들의 반합법조직)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노련은 6월 창립 후 기관지 〈노동자의 길〉 과 보고서 형태의 소책자 〈정세와 실천〉 을 발간한다. 10월 중순 제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일부가 탈퇴해 인천지역 노동자연합 준비위원회(인준위)를 결성하는데, 〈정세와 실천〉 2호가 이 쟁점을 다룬다. 인민노련의 입장은 사퇴 가능한 독자후보론이다. 민주당, 중간층, 국본은 개량의 환상에 빠져 진정한 정치 세력화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중은 직선제를 통해서라도 군부독재를 퇴진시키려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정치선동, 기층민중 생존권 투쟁 지원-지도를 통해 기층민중과 밀접히 결합해 (반)합법공간을 과감히 창출해 개량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독자후보로 출마해 원칙적 비판을 가하되, 민주진영 전체 대통령 후보 단일화도 동시에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② 실천

초기 독자후보론은 호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석규 노동열사 추모집회가 좌절되면서 정당결성(진보대중당(가) 결성 임시준비위원회)을 통한 출마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다. 한편 범CA는 국민투표 거부(직선제가 아니라 임시혁명정부) 입장에서 민중정당-민중후보 전술로 전환한다. 인민노련은 애초부터 직선제를 활용한다는 관점이었는데 운동진영이 비지로 급격히 경사되는 것을 보면서 독자후보를 모색하게 된다. 이들의 결합을 통해 ‘백본’이 결성된다. 초기 백 선생의 미사면 복권 상태 문제 때문에 제정구 씨를 후보로 추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제정구 씨가 이를 사양한 뒤 11월 12일 〈백기완 선생 대통령후보 임시 추대위원회〉(위원장 이애주 교수) 가 결성되어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복권 쟁취 위한 시한부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11월 13일 정부에서 백기완 선생의 사면, 복권을 발표하고 11월 18일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한다¹⁰⁾.

출마의 이유를 첫째, 민중이 주도해서 참다운 민주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둘째, 민중이

10) 민주연립정부를 두고 다양한 입장이 논쟁이 됨. 비지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는 제후를 주장하는 쪽과 민중을 정치세력으로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도 진보성이 있다고 보는 쪽으로 심화. 분명한 선을 긋는 제후를 주장하는 쪽은 다시 비민주적 헌법 개정을 제시하려는 측과 개별강력으로 조건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뉨. 시기를 두고도 달랐음.

주체가 되어 연대를 도모할 때만 명실상부한 민중적 단일화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김추위는 김대중 추종운동으로, 국협은 소극적 단일화 전술로 평가해 민중운동 내 파문이 일어난다. 실제 학생운동에서 비지에 동조하던 학생의 이탈이 가시화되고 민중후보 추대위에 참가한 대학이 급증한다.

이후 시국대강연회(11/29), TV유세(12/3), 대학로 10만 집회(12/6)로 이어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협과 함께 비상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며 단일화 압력을 가했으나, 김대중은 시간을 끌면서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사퇴 여부와 그 방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국 백기완 선생은 돌발적으로 사퇴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5) 군부재집권 및 사후 평가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투표율 89.2%, 노태우 후보 36.6%, 김영삼 후보 28.1%, 김대중 후보 27.0%, 김종필 후보 8.1% 였다. 개표 내내 이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군부세력은 이렇게 선거를 통해 재집권한다. 민정당의 인기가 최하위에 달했던 85년 2.12 총선 때 민정당 득표율이 35.3%였으므로 친여 고정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같이 나오면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4파전 필승론’, 김영삼은 단일화가 유리하지만 4파전으로 가도 85년 총선처럼 바람을 타면 당선 가능하다는 ‘4파전 불사론’이 팽배했다. 헛된 기대였음이 판명되었다.

민중운동의 무능과 분열은 더욱 뼈아팠다. 이미 양김은 7,8월 개헌협상 과정에서 독자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민중운동진영은 막연한 낙관 속에서 양김에 대한 호소에 머물렀고, 뒤늦게 10월 대중투쟁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단일화를 촉구하였으나 이미 기층 민중 역량은 침체되고, 후보 간 인물 비교 경쟁으로 관점도 후퇴되고 말았다. 여기에 민통련의 선부론 김대중 비판적지지 선언은 논란과 분열을 촉발시켜서 남은 역량마저 분산시켰다.

『87년 선거 평가와 전망』 (안암연구소, 88년 3월 발행)은 각 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후 평가한다. 첫째, ‘비판적 지지’운동은 ‘전폭적 지지’ 형태로 나타나 통일전선전술의 우편향을 명확히 보여준다¹¹⁾. 또한 통일전선 원칙(선민족민주운동통일, 후범민주세력단결)에 어긋나는 행태였다. 한쪽을 지지해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민주연합전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 둘째, 후보단일화추진운동은 범민주연합전선강화라는 과제를 옹기 선정했으나 전술운용에서 실패했다. 정부여당이 지역차별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11) 민통련이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는 조정역이 아니라 성급하게 특정 전술을 결정하면서 운동의 분열을 재촉하고, 보수정치세력에게 주도권도 넘겨줬다는 평가도 있음. 재야운동권 지원에 조급한 쪽은 양김이므로 민족민주운동은 대중투쟁력 복원에 충력을 기울이며 선거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정책토론회, 대중집회를 통해 양김이 보다 진보적 정책을 내놓도록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임.

시점(10월 중순)을 놓치고 11월 말에 이르러서야 본격적 실천해 돌입했다. 게다가 상층교섭 또는 도덕적 결단이라는 비대중운동적 방법에 의존하려는 입장이 주도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독자후보론 역시 의도와 현실의 부조화가 있었다. 민족민주운동의 선전의 폭을 넓히고, 민중 정당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의는 있으나 일정하게 검열된 민중후보가 아닌 일부분에 의해 강변된 민중후보운동은 소수자운동의 범위를 넘을 수 없었다. 민주연합정부도 87년 선거국면의 주체적 조건에서는 선전구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각 진영에서 선거 후 내놓은 평가도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비판적 지지론을 폈던 민통련 내 일각)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당수 단체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4개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특히 더 많은 반대세력의 태동을 미리 예견하여 전체 민족민주세력의 입장을 종합해 나가기 위한 형식과 절차를 끈기 있게 밟아 나갔어야 했다.”

“비판적 지지가 단일화의 유일무이한 방법론이 아니었음은 곧 증명되었다. 또 하나의 방안은 독자후보론으로 나타난 민주연합정부 제안 → 동참하는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방안이었다. 이런 방안이 검토되지 못했던 것은 ① 김대중으로 단일화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의 팽배, ② 독자후보 세력, 특히 민민 투 계열에 대한 누적된 불신감, ③ 전략전술수립의 미성숙성, ④ 문익환, 백기완 씨 등의 미사면복권을 타파하려는 적극성의 부재에 기인했다.”

(독자후보운동을 펼친 제헌의회 그룹)

“보수양당에 민주연합정부를 제안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정조건, 즉 민주연합정부 구성과 임무와 정책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민연정 수립운동에 대중적 힘을 불어 넣게 위해서도 민족민주운동의 최소강령을 적극 선동하여 대중을 전취하고 보수양당의 불철저성을 선명히 폭로하면서 대중의 힘에 의해 양자를 견인해야 했다.” (1988년 3월, <기사연리포트5: 대통령선거투쟁>.)

7. 총평: 1987년의 교훈과 2017년

(1) 1987년의 교훈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은 갑자기 분출된 것이 아니다. 70년대 말과 1980년 서울의 봄에서 폭발했던 민중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압되었다가 정권 중반부 유화국면을 계기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이 발생했고, 이념적 측면에서는 사회성격논쟁이 진행되면서 운동의 부활을 상징했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집권군부세력은 6.29선언을 통해 타도대상이 아니라 개헌협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개헌은 정치권의 밀실협상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머물렀으며, 노태우는 대선에 출마해 집권에 성공했다.

투쟁을 통해 1987년 하반기 개헌-선거 국면을 열었던 광장의 민중이 실제 개헌과정에서 배제되고, 선거에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지도 못하고, 후보도 단일화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87년에서 평가해보아야 할 것은 첫째, 7월에서 9월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낙관적 전망 속에서 2단계 투쟁 국면을 열지 못했던 점이다. 국본으로 모였던 민중운동진영이 6월 투쟁의 제한적 성과를 도약대로 삼아 2단계 투쟁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세인식과 투쟁, 조직노선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했다. 6.29의 양면성에 대한 공통의 평가와 폭로를 통해 야당과 차별적인 민중운동의 노선을 확립하고,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분출되어 나오는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 사회경제적 요구와 결합해 그 요구를 직선제 개헌을 넘어선 보다 넓고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모아 나가는 기획이 필요했다.

그러나 6.29 선언 이후 민통련과 노동자운동, 학생운동 세력은 스스로 새로운 국면을 열 어낼 만큼 충분한 동원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7월부터 8월까지 정점에 이르렀던 노동자대투쟁은 9월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데 민중운동은 국가의 폭력적 탄압 및 용공좌경 척결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국본은 독자 개헌요강을 성안했으나 어떤 직접적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국본은 결성 때부터 이념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대중운동을 충분히 포괄하지도 못했고, 6월 투쟁 과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조직력을 기반으로 했다가보다 대중투쟁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1987년의 두 번째 평가지점은 선거국면에서 분열되고 역량의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동력을 상승시키지 못한 후과라고 볼 수도 있다. 10월 정치권의 밀실협상 개헌이 이뤄진 후 양 김이 분열했던 것과 평행하여 민중운동도 입장이 점점 더 분화되기 시작했고,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간극은 더 커졌다. 결국 비판적지지를 통한 김대중 당선, 후보들의 결단에 의한 단일화 압박, 독자후보 출마를 통한 민주연립정부 구성 중 그 어떤 노선도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87년의 선거국면에서 나타난 노선분화는 표면적으로는 전술슬로건과 세력연합에 대한 판단의 차이였으나, 이는 국면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1986년 개헌투쟁국면부터 간극이 발생한 정세판단과 과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말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노선분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선이 분화될 수 밖에 없었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후적으로 볼 때 독자후보를 통한 민주연립정부 구성 안이야 말로 민중운동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보수야당들과의 연대를 성사시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독자후보 전술을 구사한 백본은 민연정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후보의 대표성도 미약했으며, 일부는 선도적 정치투쟁론의 한계를 반복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1987년의 민중운동의 한계와 교훈을 정리해보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민연정 구상의 구체화와 대중적 선전 실패, 조직적 측면에서는 국본의 낮은 합의 수준과 취약한 대중기반, 보수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정세판단과 과도한 의존 등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987년이 민중운동의 종말은 아니었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계급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조직적 결실을 맺기도 했고(1990년 1월 전노협 건설),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1989년 1월 전민련 발족), 여러 논란 끝에 합법 정당 건설도 현실이 되었다(1990년 11월 민중당 창당). 또한 군부파시즘에 대항한 학생운동과 노동현장 이전을 거쳐 형성된 지식인 집단과 민주노조운동으로 부상한 선진노동자집단을 전국적 단일대오로 규합하고 이념과 강령, 규율로 무장한 혁명세력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사회주의적 이념 지향을 지닌 노동자정당 건설이 추진된다. 어찌보면 1987년 이후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운동이 독자적 정립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2) 1987년과 2017년

이제 다시 2017년으로 돌아오자. 2016년 11-12월 연인원 천만의 촛불집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강제했다는 성과를 공동의 경험으로 만들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집회의 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나 조기 대선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중운동은 1987년 이후 형성된 시민운동과 함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결집해 집회를 주관하고 있다.

2016-2017년과 1985-1987년은 여러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권력에서 배제된 야당 세력이 국면을 주도했다. 1987년의 야당은 6월 항쟁을 여야간 개헌논의로 수렴했고, 2017년의 야당(비박계 바른정당을 포함해)은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촛불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수렴했다. 또한 1987년과 2016년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광장의 목소리를 가득 채웠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87년 국본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합의 지점이 매우 협소하고, 촛불을 대표하는 위상이 아니라 광장을 열어주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이러한 유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당시의 경제상황은 3저 호황시기였으나, 현재는 장기침체 속에서 2008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앞두고 있다. 또한 1987년 직선제

개혁이라는 포지티브한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2016년에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네거티브한 요구가 중심이다. 1987년의 지배계급은 “협상된 이행”(직선제 개혁과 3당 합당, 김영삼 정권 등장)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대응했으나 2017년의 지배계급은 1987년 체제의 전환이라는 구호만 무성할 뿐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와 비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 정치권의 개혁논의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만 머물러 있다.

아직 박근혜가 퇴진을 한 것도, 퇴진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향후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바를 묻고 있는 공간에서 민중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87년과 2017년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주체적 조건이 당시보다 낙관적인 것 또한 아니다. 부패 이슈가 중심이 되고 있고 문재인 지지로 대변되는 야당을 통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광장의 촛불이 어떤 요구를 만들고 자기 조직화할 것인지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투쟁의 2번째 국면을 열어가는 것이 급선무다. 박근혜의 구속, 박근혜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박근혜 정책의 폐기,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변화의 열망을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상기해야 한다. 광장의 요구가 일터와 삶터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고착화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 속에서 착취받고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조직화 시도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단계의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민중운동 내부에서 형성된 논리와 노선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시에 분출되었던 다양한 사건과 요구, 사회성격 논쟁으로 대표되는 이론적 쟁점, 주요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올해 1987년 30주년이 되는 만큼 보다 풍부한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끝〉

《참고자료》

-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8.
- 권형철,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1990.
- 김대영, 「87년 개헌협상과 국민운동본부의 정치행위」, 정신문화연구, 2006.
- 안암연구실 편, 『87 선거평가와 전망』, 백산서당, 1988.
- 서중석, 『6월 항쟁』, 돌베개, 2011.
- 송운학 편저, 『민중후보운동관련 주요자료선집』, 들녘, 1988.
- 전효관, 1980년대 사회운동논쟁의 정리를 위하여, 『현실과 과학』, 5, 새길, 1990.
- 정상호, 「1987년 대선과 후보단일화 논쟁의 비판적 재평가」, 『역사비평』, 2012. 2.
- 조계원, 「한국의 87년 헌정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1988.
- 편집부, 『대통령선거투쟁:민족민주운동의 논리와 실천(기사연리포트 5)』, 민중사, 1988.
- 편집부, 『전환: 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1987.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헌과 민주화운동』, 민중사, 1986.